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 영향 요인 분석: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최 서 영¹

¹ 서강대학교

| 초 록 |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양상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는 직업 복귀 형태나 복귀 일자리 특성을,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산재가 이후 노동시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생존 분석 방법을 이용해 노동시장 상, 중, 하층의 지위 회복 누적 생존 비율 그래프를 그리고, 계층별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은 낮지만, 재취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지위를 회복했다. 또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 여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뿐 아니라 근로 능력 감소 정도가 지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 노동시장에서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을 좌절시키는 메커니즘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산재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 회복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다르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재해 이전과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재해 이전에 기대한 것과 같은 보상과 승진을 기대하며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주요 용어: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RTW), 노동시장 지위, 지위 회복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양상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했다.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은 낮지만, 재취업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지위를 회복했다. 또한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 여부만,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 여부뿐 아니라 근로 능력 감소 정도가 지위 회복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번 연구는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르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재해 이전과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이 더욱 세심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초고는 2024년 산업노동학회 하계 학술 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가톨릭대학교 신회주 교수님과, 논문 작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서강대 사회학과 〈불평등과 문화워크숍〉 구성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투 고 일: 2024. 10. 28.
■ 수 정 일: 2025. 01. 29.
■ 게재확정일: 2025. 02. 07.

I. 서론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경험을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을 중심으로 다룬다.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는 누가 더 좋은 일자리로 복귀했는지보다 누가 재해 이전 상태를 더 잘 회복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재 이후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관심은 본질적으로 ‘산재’가 개인 수준의 노동시장 경험을 이전보다 얼마나 부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와, 무엇이 산재로 인한 부정적 변화를 최소화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산재 연구는 ‘회복’ 및 ‘회복에 대한 영향 요인’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산재 노동자의 ‘회복’은 건강, 직무 수행 능력, 사회관계, 임금 등 다양한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노동시장 지위 회복 및 지위 회복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회복을 직업 및 원직장으로의 복귀에 집중해 분석해 왔으며, 직업 복귀 영향 요인으로서 개별 일자리 특성에만 주목한 한계를 가진다. 일부 선행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할 때, 직업 및 원직 복귀 여부뿐 아니라 재해 이전 상태를 회복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안준기, 오세미, 2015; 이정화, 2017). 하지만 이들은 직업 및 원직장 복귀 이외의 직업 복귀에서 재해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지위 회복을 중심으로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경험을 분석한다. 이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경험 분석을 수행함을 뜻한다. 첫째,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를 종속변수로 두고,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경험 분석을 한다. 둘째,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요양 종결 이후 지위 회복 가능성과 회복까지 소요 되는 기간이 다른지 분석한다. 셋째,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지위 회복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경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 자료에 대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생존분석은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뿐 아니라 지위 회복 소요 기간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일부 연구(박은주, 2012; 2018; Mackenzie et al. 1998)가 생존분석을 활용해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원직 복귀, 재취업)를 분석한 바 있으나,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지위 회복 소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자의 실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위 회복 여부만큼 회복 소요 기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경험을 분석한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가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 경험을 분석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 지위 회복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못해왔음을 지적한다. 다음 절에선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여부 및 소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경험 분석을 수행한다. 결론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 정책에 대해 제언한다.

II. 선행 연구

1.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경험

직업 복귀(Return to Work, RTW)는 산재 노동자가 원직 복귀나 재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가장 단순하게는 원직장으로 복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업 복귀의 질에 주목하는 연구에선 성공적인 혹은 괜찮은(decent) 직업 복귀(이정화, 2017)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사용하기도 한다. 산재 이후 노동시장 경험 연구에서 직업 복귀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Awang,

2016; Krause et al., 2001; Butler et al., 1995; Baldwin et al., 1996; Crook & Moldofsky, 1994; Pransky et al., 2005; Young et al., 2005; 2010; Oleinick, 1996)

국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요양 종결 이후 직업 복귀 가능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재해 발생 당시 임금이 높을수록, 요양 기간 중 재해 발생 사업장을 퇴사하지 않았을수록, 요양 기간이 짧을수록, 장애등급이 높을수록(중증도가 낮을수록) 높았다(박은주, 2012). 재해 발생 당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직업 복귀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으나,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큰 차이가 발견되진 않았다(강다솔 외, 2021). 한편 원직 복귀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산재 노동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 기간이 길수록 요양 종결 이후 원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양재성 외, 2012), 재해 발생 당시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자, 사무직일수록 원직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안준기, 오세미, 2015).

산재 노동자의 복귀 일자리 특성에 주목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복귀 유형에 따른 일자리 질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원직 복귀자는 타 직장 재취업자보다 고용의 질이 양호하고, 고용유지 기간이 길며(한기명, 이민아, 2017; 박은주, 2014; 김지원, 2019; 김미옥 외, 2013),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다(남예지 외, 2019; 이웅, 엄명용, 2016). 특히 고용유지 기간은 직업 복귀 유형에 따른 차이가 매우 컸다. 박은주(2014)에 따르면 원직 복귀자는 첫 복귀 직장에서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정도로 낮지만, 재취업자는 과반으로 높았다. 또한 한기명과 이민아(2017)도 원직 복귀자가 재취업자에 비해 고용유지 기간이 길고, 실업 횟수가 적음을 보여줬다.

정리하면,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 경험에 주목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직업 및 원직 복귀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와, 직업 복귀 유형에 따른 전반적인 일자리 질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 연구는 누가 직업/원직으로 복귀하는지와 직업 복귀 유형이 이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의 중요성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를 수 있음을 놓쳤다. 또한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를 고려하지 않았다.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는 직업 복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동시에,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2.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 평가

이 절에선 기존 연구가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해 왔는지를 살피고, 이것의 의의와 한계를 논한다. 기존 연구의 주된 직업 복귀 성과 평가 기준은 직업 복귀와 원직장 복귀 여부였다. 특히 원직장 복귀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직업 복귀의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이준상, 2019; 김자영, 2022; 이상진, 전무경, 2018; 이상진, 2011; 이승욱, 김선규, 2014). 익숙한 원직장으로의 복귀는 직장 적응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듯 질적으로 더 나은 직업 복귀를 보장하기 때문이다(안영신 외, 2019; 남예지 외, 2019; 박은주, 2014; 한기명, 이민아, 2017).

일부 연구는 직업 및 원직장 복귀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가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가 복직(재취업)과 직장 적응, 직장에서의 발전 등(Young et al., 2005) 일련의 연속적 과정임을 고려해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윤소진 외, 2023; 이정화, 2017). 이 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직업 복귀에 성공한 산재 노동자들의 일자리 만족도, 이직 의향, 고용유지 기간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업 복귀 산재 노동자의 일자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했다. 특히 복귀 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직 복귀자는 재취업자보다 일자리 만족도가

높고 이직 의향이 낮았으며(안영신 외, 2019; 이웅, 엄명용, 2016), 고용유지 기간이 길고 평균적으로 실업을 덜 경험했다(박은주, 2014; 한기명, 이민아, 2017).

다만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과정으로 보는 연구와 사건으로 보는 연구는 상호보완적일 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대체하진 않는다. 직업 복귀는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지만, 직업 및 원직 복귀처럼 재해 이후 노동시장 경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살피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사건으로서의 직업 복귀 성과는 직업 복귀와 원직장 복귀를 통해서만 평가될 뿐, 더 정교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를 직업 및 원직 복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의 한계는 가장 최소적인 직업 복귀(복직, 재취업 여부)와 가장 이상적인 원직 복귀 사이에 존재하는 재취업을 통한 괜찮은 직업 복귀에 주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원직 복귀에 국한되지 않는 괜찮은 직업 복귀에 주목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이정화, 2017; 박은주, 홍백의, 2012; 안준기, 오세미, 2017). 이 연구는 복귀 유형에 기반해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지위 회복을 사건으로 두진 않았다. 그 대신 개인 수준의 복귀 일자리 질에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이 미치는 영향과(이정화, 2017), 집단 수준에서 재해 전후 일자리 질 하락을 분석했다(안준기, 오세미, 2015). 박은주와 홍백의(2012)는 노동시장 지위 회복에 대한 영향 요인에 분석했지만, 개별 일자리 특성인 고용형태 회복에만 주목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별 일자리 특성이 아닌 노동시장 지위에 기반해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기회(혹은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은 종사상 지위나 임금과 같은 단일한 일자리 특성보다는 더 복합적인 지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를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원직 복귀뿐 아니라 지위 하락을 겪지 않은 재취업자도 포함된다.

III. 경험 분석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2차 코호트 1~5차년도(2018~2022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 요양 종결 노동자의 재해 발생 당시 일자리 특성, 직업 복귀 유형, 요양 종결 이후 일자리 이력 등 산재 전후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하다. 물론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요양 종결 산재 노동자를 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추적 조사한 자료로,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경험 분석 결과(IV장)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전체 산재 노동자 중 과반이 18개월 이내에 첫 지위 회복에 성공한다. 또한 산재 노동자는 요양 기간을 포함해, 재해 사업장 퇴사 시점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하면 지위 회복률이 정체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요양 종결 이후 5년 간의 노동시장 지위 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진다. 물론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동을 장기간 추적함으로써 궁극적인 지위 회복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직업재활 정책 측면에선 요양이 종결된 초기 몇 년 간의 지위 회복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직업재활 정책은 최대한 빨리,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 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모집단은 2017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요양이 종결된 산재 노동자이다. 패널 표본의 규모는 1차 조사 당시 3,294명이었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재해 발생 당시 자영업자였던 24명을 제외한 3,270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 당시 임금 노동자였던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및 지위 회복 소요 기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박은주, 2018). 다만 복귀 일자리 입사 연도나 재해 전후 일자리 특성 변수에 대한 결측치로 일부가 제외되어 최종 분석에는 2,986명이 활용되었다.

2. 분석 변수

1) 종속변수: 노동시장 지위 회복 및 소요 기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지위 회복과 지위 회복 소요 기간이다. 우선 ‘노동시장 지위 회복’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로 복귀한 경우를 사건 발생(‘1’),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생존(‘0’)으로 보았다. 사건 발생에는 원직 복귀자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 일자리로 재취업한 자가 해당한다. 생존(사건 미발생)에는 조사 종료 시점까지 직업 복귀를 하지 못하였거나,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미만 일자리로 재취업한 자가 포함된다.

재해 발생 전후의 노동시장 지위는 이철승(2017)이 제시한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토대로 평가했다. 결합 노동시장 지위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 세 가지 일자리 특성을 결합해 도출한 지위를, 상층, 중층, 하층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상층에는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이 포함되고, 중층에는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이 포함되며, 하층에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포함된다.

결합 노동시장 지위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대기업 노동자인지 중소기업 노동자인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중 하나의 특성에만 기반해 노동시장 지위를 평가하는 것보다,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지위 분류는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상층, 중층, 하층 세 가지로 재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결합 노동시장 지위 분류를 사용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왜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상층, 중층, 하층으로 재분류해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러한 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본 연구가 산재 노동자의 재해 전후 노동시장 지위를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토대로 측정하고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 지위 간의 위계를 정할 뚜렷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 여부를 평가할 기준 역시 모호해진다. 가령, 재해 당시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이었다가 재해 이후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복귀한 경우, 현재의 분류에선 모두 중층으로 ‘지위 회복’에 해당하지만, 개별 지위를 활용할 경우 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된다. 물론 개별 결합 노동시장 지위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연구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를 회복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개별 결합 노동시장 지위 간의 위계를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이철승(2017)의 분류대로 하층, 중층, 상층으로 구분한 후 이를 토대로 지위 회복 여부를 평가하였다.

둘째, 동일한 계층(상, 중, 하) 내에서 노동시장 지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연구는 직업 복귀 성과를 복귀 유형이나 일자리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자체가 직업 복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계에 직면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지위 측정 방식이 한국 분절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적절한지 물을 수 있다¹⁾. 예를 들어,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주요한 분절 경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형성된다고 보는 기업규모 중시론의 관점에서, 고용형태나 노조 유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동일한

지위로 분류하는 결합 노동시장 지위의 분류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내부노동시장 발전과 그에 따른 승진 및 보상 체계의 기업별 특수성을 주요하게 보는 관점에서, 동일한 지위로 재취업하더라도 원칙 미복귀 자체가 장기근속에 기반한 승진 및 임금 상승의 기회를 상실한, 사실상의 하락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선 산재 노동자의 재해 전후 노동시장 지위를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토대로 평가하되,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 지위를 측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해, 노동시장 지위 회복을 ‘재해 사업장 규모 이상 일자리 복귀’와 ‘원직장 복귀’를 기준으로 평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부록(부표 1 및 부도 1, 2)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위 회복 소요 기간은 재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를 처음 획득하기까지의 기간을 개월 단위로 산정하였다. 5차년도까지 지위 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조사 시점인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했다. 다만 원칙 복귀자는 요양기간 동안 재해 사업장과 고용 관계를 유지한 자로, 재해 발생 이후 노동시장 지위가 하락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생존시간의 최솟값인 1개월을 일괄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선 요양 종결이후 1차조사 시점까지 재해 사업장을 퇴사한 적이 없는 산재 노동자만 원칙 복귀자로 분류한다. 재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재해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원칙 복귀자가 아닌 재취업자로 분류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가 처음 지위를 회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위 회복 소요 기간을 구하고 있어, 첫 지위 회복이 일회적이고 단기적일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재취업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한기명, 이민아, 2017),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다만 분석자료의 재취업자 지위 회복 전이 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확인해 본 결과(표 1), 재취업을 통해 재해 발생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를 획득한 산재 노동자가, 자발적·비자발적 이직 후 회복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93.91%로 매우 높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시점을 처음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진다. 다만 아래 표는 재취업자가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을 때 지위 회복 상태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재취업자가 퇴사 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와 같이 노동시장 이탈자로 머무를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표 1. 산재 노동자 노동시장 지위 회복에 대한 전이확률

		재취업자 n+1번째 일자리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미만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	
재취업자 n번째 일자리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미만	63.33	36.67	100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	6.09	93.91	100
	총	14.94	85.06	100

주: 재취업자의 n번째 일자리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일 때, n+1번째 일자리도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일 확률을 나타냄.

1)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원직장 복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비교해 정확도 측면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원직장 복귀 영향 요인에 주목해 온 기존 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차별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직장 복귀만으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여부를 평가할 경우, 원직장 복귀와 직업 복귀 사이에 있는 갭은 재취업 경험에 주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여기서 ‘갭’은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기보다, 재해 당시에 준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산재 노동자 다수가 불안정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산재(특히 원칙 미복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존의 직업 복귀 유형에 대한 영향 요인과 직업 복귀 유형에 따른 일자리 특성 분석에만 집중하다 보면, 재해 이전부터 불안정 노동을 하던 집단을 원칙 미복귀로 인해 불안정 노동을 하게 된 집단으로 잘못 이해할 여지가 있다. 또한 재해 전후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 원직장 복귀 여부의 중요성은 재해 사업장 근속연수가 긴 노동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커지는데, 산재 노동자는 비정규직과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 동일 노동시장 지위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위 회복으로 보는 것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설명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설명변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 건강 및 요양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남성을 기준변수 한다. 연령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30대 이하를 기준변수로 한다. 교육 수준은 고졸미만, 고졸, 대졸로 구분하고, 고졸미만을 기준변수로 한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유무로, 자격증 보유는 자격증 유무로 각각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측정에는 요양 종결 직후인 1차 조사 응답이 활용됐다.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 변수는 노동시장 지위, 직종, 업종, 근속연수로 구성된다. 노동시장 지위는 하층(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층(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 상층(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하층을 기준변수로 한다. 직종은 하위 2차(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종사자), 하위 1차(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직), 독립 1차(관리자, 전문가, 사무직)으로 구분하고, 하위 2차를 기준변수로 하였다.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고, 제조업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재해사업장 근속연수는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6개월미만을 기준변수로 했다.

건강 및 요양 특성 변수는 재해 유형, 요양 기간, 장애등급,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 직업 및 사회 재활서비스 이용, 원직 복귀 여부로 구성된다. 재해 유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업무상 사고를 기준변수로 한다. 요양 기간은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로 구분하고, 6개월 이하를 기준변수로 한다. 장애등급은 연속변수로 최솟값인 1은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하고, 최댓값인 15는 장애가 없음을 나타낸다.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는 연속변수로 1은 “전혀 회복되지 않음”, 2는 “아직 되지 않은 편임”, 3은 “보통임”, 4는 “어느 정도 회복된 편임”, 5는 “완전히 회복됨”을 의미한다. 해당 변수는 1차 조사 당시 응답을 토대로 측정되었다. 직업 및 사회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는 이용과 미이용으로 구분하고, 미이용을 기준변수로 한다. 원직복귀 여부는 복귀와 미복귀로 구분하고, 미복귀를 기준변수로 한다. 아래 <표 2>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2.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찰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2986	0.732	0.443	0	1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소요기간(개월)	2986	27.373	32.602	1	342
성별	2986	1.172	0.378	1	2
연령	2986	2.735	1.034	1	4
배우자 유무	2986	0.665	0.472	0	1
교육 수준	2986	1.817	0.709	1	3
자격증 유무	2986	0.306	0.461	0	1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2986	1.678	0.638	1	3
재해 당시 직종	2986	2.218	0.608	1	3
재해 당시 업종	2986	2.030	0.826	1	3
재해사업장 근로기간	2986	1.834	0.936	1	3
재해 유형	2986	1.067	0.270	1	3
요양 기간	2986	1.589	0.734	1	3
장애등급	2986	11.897	3.153	1	15

변수명	관찰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주관적 건강회복 상태	2986	2.674	1.089	1	5
사회 재활서비스 이용	2986	0.166	0.372	0	1
직업 재활서비스 이용	2986	0.097	0.296	0	1
원직 복귀 여부	2986	0.293	0.455	0	1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생존 분석을 활용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시간에 따른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위별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지를 분석한다. 생존분석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지위 회복률을 구하기 위해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분석하였다. 카플란-마이어 분석은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를 추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특정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 데이터 자체에 기반해 생존 확률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생존 확률은 재해 당시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사람들의 누적 생존 비율을 뜻한다. 이 분석 방법은 우측 중도 절단된(right-censored)된 데이터를 고려한 생존 확률을 제시함으로써, 생존율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식 (1)에서 t_i 은 사건이 발생한 특정 시점, d_i 은 시간 t_i 에서 사건이 발생한 개체 수, n_i 는 시간 t_i 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생존한 개체 수(즉, 사건의 위험에 노출된 개체 수)를 각각 의미한다.

$$\hat{S}(t) = \prod_{t_i \leq t} \left(1 - \frac{d_i}{n_i}\right) \quad \text{식 (1)}$$

또한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지위 회복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콕스 비례위험 모형은 준모수적 방법으로, 범주형 변수 뿐 아니라 연속형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선 시간에 따른 지위 회복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수식(2)에서 $h(t|X)$ 는 시간 t 에서 독립변수 X 에 따른 위험 함수(hazard function), $h_0(t)$ 은 설명변수와 무관하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준 위험 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 β 는 설명 변수 X 에 대한 회귀 계수를 의미한다.

$$h(t|X) = h_0(t) \exp(\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p X_p) \quad \text{식 (2)}$$

IV. 경험 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

이 절에선 분석 대상의 특성별 지위 회복률을 제시한다. 분석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률(이하 '지위 회복률')이 76.17%, 여성은 71.20%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직업 복귀 성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지위 회복률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이상은 지위 회복률 61.37%로 낮았다. 교육 수준에 따른 직업 복귀 성과는 교육 수준과 정비례해, 고졸미만은 지위 회복률이 68.24%인데 반해 대졸은 지위 회복률이 82.39%로 높았다.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을 보면,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지위 회복률은 하층(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지위 회복률이 80.76%, 중층(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은 지위 회복률이 70.67%, 상층(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은 지위 회복률이 77.99%였다. 직종에 따른 지위 회복률은 하위 1차(기능 종사자,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직) 76.38%, 독립 1차(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76.29%, 하위 2차(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 종사자) 73.07%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의 경우 지위 회복률은 제조업 76.56%, 건설업 74.98%, 기타 74.49% 순이었다. 근로기간에 따른 지위 회복률의 경우, '1년 이상'은 78.78%이고, '6개월 미만'은 73.92%,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69.81%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가장 낮았다.

건강 및 재할 특성을 보면, 재해 유형에 따른 지위 회복률은 산재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상 사고가 76.10%로, 업무상 질병(63.24%)이나 출퇴근 재해(64.71%)보다 높았다. 요양 기간에 따른 지위 회복률은 요양 기간이 길수록 낮았다. '6개월 이하'는 지위 회복률이 81.91%인데 반해, '1년 초과'는 지위 회복률이 49.49%로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에 따른 지위 회복률은 장애등급이 높을수록(중증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가 높을수록 높았다. 직업 재활서비스 이용자는 미이용자보다 지위 회복률이 다소 낮았다. 사회 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미이용자보다 전반적인 지위 회복률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직 복귀 여부에 따른 지위 회복률은 65.31%로, 원직 미복귀자 중 과반 이상이 재취업을 통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하고 있었다.

표 3. 분석 대상자 특성 및 특성별 노동시장 지위 회복률

(단위: %)

변수명	내용	비율	원직복귀율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성별	1: 남성	82.78	32.36	76.17
	2: 여성	17.22	32.50	71.20
연령	1: 30대 이하	16.48	37.11	84.47
	2: 40대	20.67	40.68	82.99
	3: 50대	35.66	34.22	77.25
	4: 60대 이상	27.19	20.81	61.37
결혼상태	1: 유배우자	66.54	36.08	74.62
	0: 배우자 없음	33.46	25.05	76.71
교육	1: 고졸미만	35.96	22.87	68.24
	2: 고졸	46.39	35.73	78.10
	3: 대졸	17.65	42.98	82.39
자격증 유무	1: 있다	30.61	37.96	77.78
	0: 없다	69.39	29.93	74.23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1: 하층(중소기업 비정규직)	41.65	14.76	80.76
	2: 중층(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	48.90	40.09	70.67
	3: 상층(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	9.45	70.23	77.99
재해 당시 직종	1: 독립1차(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9.94	45.23	76.29
	2: 하위1차(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직)	58.35	31.81	76.38

변수명	내용	비율	원직복귀율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재해 당시 업종	3: 하위2차(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종사자)	31.71	29.41	73.07
	1: 제조업	32.66	44.38	76.56
	2: 건설업	31.68	15.35	74.98
	3: 기타	35.66	36.54	74.49
재해사업장 근로기간	1: 6개월 미만	53.49	15.95	73.92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9.60	28.98	69.81
	3: 1년 이상	36.91	57.08	78.78
재해유형	1: 업무상 사고	93.85	32.13	76.10
	2: 업무상 질병	5.63	38.59	63.24
	3: 출퇴근 재해	0.52	11.76	64.71
요양기간	1: 6개월 이하	55.90	37.04	81.91
	2: 1년 이하	29.27	30.62	75.78
	3: 1년 초과	14.83	18.35	49.49
장해등급	1~3급	2.69	2.27	31.46
	4~7급	7.80	23.13	56.64
	8~9급	10.80	26.91	69.01
	10~12급	27.34	32.55	77.59
	13~14급	31.04	33.40	78.79
	무장해	20.34	41.05	83.26
주관적 건강회복 상태	1: 전혀 회복되지 않음	10.73	9.69	48.16
	2: 아직 회복되지 않은 편임	43.94	27.49	72.72
	3: 보통임	17.31	35.34	79.96
	4: 어느 정도 회복된 편임	23.24	45.26	86.33
	5: 완전히 회복됨	4.77	55.13	89.74
직업재활서비스	1: 이용	9.66	33.65	72.87
	0: 미이용	90.34	20.57	75.58
사회재활서비스	1: 이용	16.57	27.12	68.68
	0: 미이용	83.43	33.34	76.64
원직 복귀 여부	1: 원직 복귀	29.33	100	99.69
	0: 원직 미복귀	70.33	4.33	6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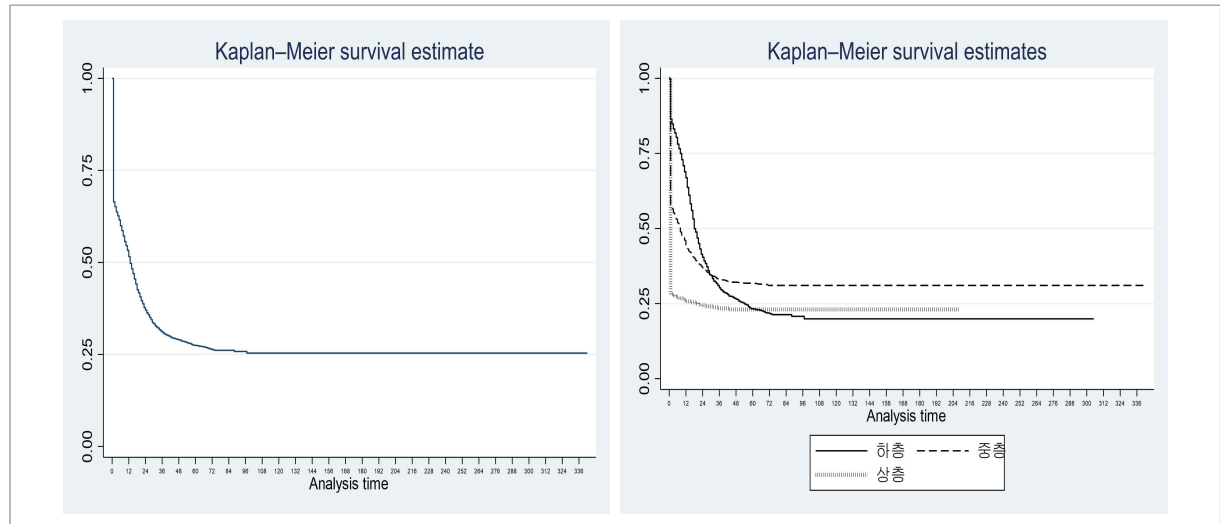
2.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소요 기간 분석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소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33.56%, 3개월 이내가 36.27%, 6개월 이내가 40.05%, 12개월 이내가 48.43%, 18개월 이내가 57.43%, 24개월 이내가 62.96%, 30개월 이내가 6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산재 노동자의 과반은 원직 복귀 혹은 재취업을 통해 약 18개월 이내에 재해 발생 당시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하였다(그림 1 좌측).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나눠서 살펴보면(그림 1 우측), 하층의 경우 1개월 이내가 13.58%, 3개월 이내가 16.83%, 6개월 이내가 21.92%, 12개월 이내가 33.08%, 18개월 이내가 50.08%, 24개월 이내가 59.58%, 30개월 이내가 65.67% 였다. 중층의 경우 1개월 이내가 42.05%, 3개월 이내가 44.8%, 6개월 이내가 48.16%, 12개월 이내가 55.67%, 18개월 이내가 59.96%, 24개월 이내가 63.18%, 30개월 이내가 65.66% 였다. 상층의 경우

1개월 이내가 71.86%, 3개월 이내가 72.2%, 6개월 이내가 72.88%, 12개월 이내가 74.24%, 18개월 이내가 74.58%, 24개월 이내가 75.59%, 30개월 이내가 75.59%였다. 요양 종결 이후 약 5년이 지난 본 조사의 종료 시점까지 지위 회복을 하지 못한 비율은 중층(31.04%), 상층(23.05%), 하층(19.91%)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시간 흐름에 따른 지위 회복률의 변화 정도가 다르며, 특히 원직 미복귀자의 지위 회복률은 노동시장 지위가 높을수록 더디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림 1. 산재 노동자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누적 생존 비율 그래프



- 주: 1) 재해 사업장 퇴사 시점부터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까지 소요된 기간을 나타냄.
2) 원직 복귀자의 경우 지위가 하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생존분석에서 가장 짧은 생존 기간인 1개월을 할당함.

3.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영향 요인

본격적으로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지위 회복’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에 앞서, 전체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표 4).²⁾ 주목할 점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높을수록 지위 회복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는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직업 및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고, 복귀 일자리 질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직업 복귀 성과의 격차가 존재함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가능성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에선, 원직 복귀 여부를 통제할 경우 하층에 비해 중층과 상층의 지위 회복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높을수록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으나, 원직 복귀에 실패할 경우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높은 원직 복귀 가능성은 인적 자본이나 숙련 수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내부 노동시장이 발전해 고용 보호의 일종인 원직 복귀 제도의 혜택을 누린 결과로써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고, 30대 미만보다 60대 이상이 지위

2) 이 글에선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험비가 아니라 회귀계수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콕스 비례 위험 분석에서 사용되는 위험비(hazard ratio)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위험률의 변화를 뜻한다. 회귀계수와 위험비, 위험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위험비가 1보다 크면 회귀계수는 0보다 크게 되며 이는 위험률의 증가를 의미한다. 반대로 위험비가 1보다 작으면 회귀계수는 0보다 작고, 이는 위험률의 감소를 의미한다.

회복 가능성이 낮았다.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건설업 종사자는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았다. 건설업 종사자 중 일용직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지위 회복 가능성은 이들이 재해 이후에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거나 영세 사업장으로 이직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건강 및 요양 특성의 경우 요양 기간이 '6개월 이하일 때보다 '1년 초과일 때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장애등급이 높을수록(중증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가 높을수록 지위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 4. 노동시장 지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명	모델1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성별(rf: 남성)	-0.220*** (0.0645)
연령(rf: 30대 미만)	
40대	0.0511 (0.0709)
50대	-0.0356 (0.0709)
60대	-0.453*** (0.0848)
결혼상태(rf: 유배우자)	0.0538 (0.0494)
교육 수준(rf: 고졸 미만)	
고졸	0.110* (0.0559)
대졸	0.121 (0.0753)
자격증 보유(rf: 미보유)	0.0235 (0.0478)
재해 당시 노동시장지위(rf: 하층)	
중층	-0.591*** (0.0613)
상층	-0.770*** (0.0949)
재해 당시 직종(rf: 하위 2차)	
하위1차	-0.0592 (0.0781)
독립1차	-0.0848 (0.0835)
재해 당시 업종(rf: 제조업)	
건설업	-0.148* (0.0687)
기타	-0.0326 (0.0600)
재해사업장 근로기간(rf: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0.0657 (0.0828)

변수명	모델1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1년 이상	0.0835 (0.0630)
재해 유형(rf: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0.0860 (0.109)
출퇴근 재해	0.0363 (0.357)
요양 기간(rf: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0.101 (0.0516)
1년 초과	-0.791*** (0.0965)
장해등급	0.0363*** (0.00971)
주관적 건강	0.0801*** (0.0217)
사회 재활서비스 이용	-0.0423 (0.0639)
직업 재활서비스 이용	0.0694 (0.0773)
원직 복귀 여부	2.733*** (0.0824)
Pseudo R ²	0.495
관찰 개수	2,986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01$, ** $p < 0.01$, * $p < 0.05$.

2)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 지위 회복 영향 요인

<표 5>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지위 회복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1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하층인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30대 미만보다 60대 이상이, 요양 기간이 길 수록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 재해 당시 직종이 하위2차일 때보다 하위 1차일 때, 장해 등급이 높고(중증도가 낮고)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가 좋을수록, 원직 복귀자일수록 지위 회복 가능성이 높았다. 모델2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중층인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30대 미만보다 60대 이상이, 요양 기간이 '6개월 이하' 일 때보다 '1년 초과'일 때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고,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가 좋을수록, 원직 복귀자일수록 지위 회복 가능성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하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중층에선 성별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과 요양 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만 지위 회복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이 달랐다. 모델3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상층인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자가 원직 미복귀자보다 지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외 다른 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 지위 회복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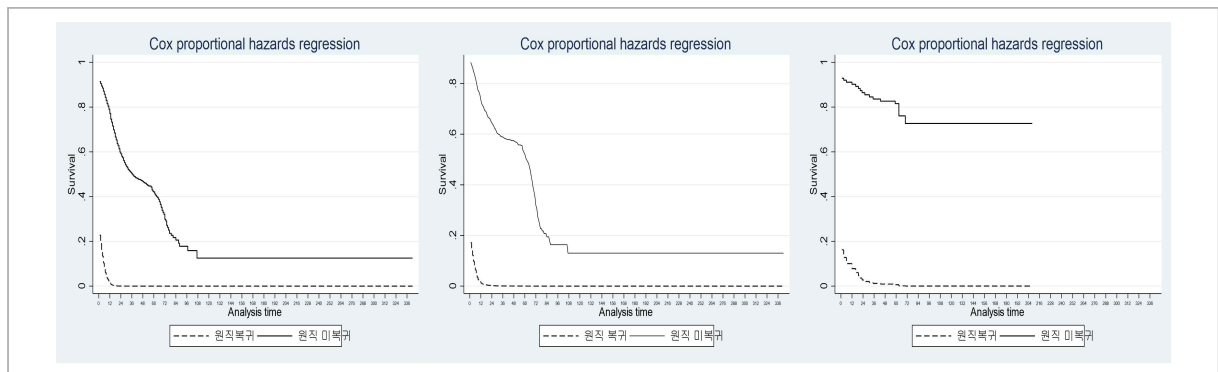
변수명	모델1(하층)	모델2(중층)	모델3(상층)
성별(rf: 남성)	-0.201 (0.109)	-0.214* (0.0894)	-0.0841 (0.222)
연령(rf: 30대 미만)			
40대	0.201 (0.131)	-0.114 (0.0960)	0.110 (0.188)
50대	-0.0406 (0.126)	-0.0719 (0.0951)	0.0149 (0.211)
60대	-0.450** (0.137)	-0.478*** (0.123)	-0.256 (0.386)
결혼상태(rf: 유배우자)	0.0109 (0.0733)	0.0321 (0.0724)	0.0143 (0.198)
교육 수준(rf: 고졸 미만)			
고졸	0.0896 (0.0774)	0.150 (0.0894)	0.163 (0.259)
대졸	0.143 (0.124)	0.176 (0.111)	0.0868 (0.287)
자격증 보유(rf: 미보유)	0.0317 (0.0785)	-0.0195 (0.0685)	-0.0251 (0.143)
재해 당시 직종(rf: 하위 2차)			
하위 1차	0.202* (0.0887)	-0.0818 (0.0855)	-0.132 (0.200)
독립 1차	0.143 (0.217)	0.00664 (0.105)	-0.0456 (0.253)
재해 당시 업종(rf: 제조업)			
건설업	-0.208 (0.110)	-0.250* (0.120)	-0.0565 (0.476)
기타	-0.0783 (0.126)	-0.0937 (0.0776)	0.0755 (0.164)
재해 사업장 근로 시간(rf: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0.0247 (0.134)	-0.0526 (0.110)	-0.211 (0.458)
1년 이상	0.209 (0.129)	0.00718 (0.0790)	-0.136 (0.302)
재해유형(rf: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0.00186 (0.257)	-0.262 (0.161)	-0.0282 (0.201)
출퇴근 재해	-0.354 (0.719)	0.212 (0.507)	-0.0834 (0.736)
요양 기간(rf: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0.333*** (0.0759)	0.0222 (0.0789)	0.00617 (0.165)
1년 초과	-1.319*** (0.163)	-0.500*** (0.136)	-0.120 (0.262)

변수명	모델1(하층)	모델2(중층)	모델3(상층)
장해등급	0.0523*** (0.0152)	0.0247 (0.0138)	-0.000143 (0.0317)
주관적 건강	0.0975** (0.0338)	0.114*** (0.0320)	-0.0165 (0.0674)
원직 복귀 여부	2.953*** (0.150)	2.486*** (0.117)	2.967*** (0.446)
사회 재활서비스 이용	0.0738 (0.0958)	-0.123 (0.0966)	0.000989 (0.204)
직업 재활서비스 이용	-0.0641 (0.115)	0.146 (0.115)	0.0909 (0.277)
Pseudo R ²	0.224	0.260	0.040
관찰 개수	1,200	1,491	295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01$, ** $p < 0.01$, * $p < 0.05$.

정리하면 중층과 하층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가능성에는 요양 기간, 장해 및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 등 근로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상층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가능성에는 원직 복귀 이외 다른 변수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원직 복귀 여부와 지위 회복 가능성 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생존함수 그래프를 그렸다(그림 2). [그림 2]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원직 복귀자와 미복귀자의 누적 생존 비율을 나타낸다. 하층 산재 노동자 중 원직 미복귀자의 과반이 지위 회복을 하는 데 대략 36개월이 소요 됐으며, 조사 종료 시점에는 원직 미복귀자 중 38.68%를 제외하고 지위 회복을 했다(그림 2 좌측). 중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미복귀자의 과반이 지위 회복을 하는데 대략 68개월이 걸려 하층보다 다소 긴 시간이 걸렸으나, 이후 누적 생존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해, 조사 종료 시점에 31.01%를 제외한 원직 미복귀 산재 노동자가 지위 회복을 하였다(그림 2 가운데). 상층 산재 노동자는 조사 종료 시점까지 원직 미복귀자의 과반이 지위 회복을 하지 못했으며, 조사 종료 시점의 누적 생존 비율은 76.22%였다. 이는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에 있어서 원직 복귀가 가지는 중요성은 상층, 중층, 하층 순으로 크며, 상층의 경우 원직 복귀 이외 방법으로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림 2. 노동시장 지위별 원직 복귀 여부에 따른 생존함수



주: 1) 좌측부터 하층, 중층, 상층 나타냄.
2) 원직 복귀는 1차 조사 당시 원직 복귀 여부를 나타냄.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층에선 ‘산재로 인한 실직’ 자체가 지위 회복을 어렵게 하고, 하층과 중층에선 ‘산재로

인한 근로 능력 감소가 지위 회복에 어렵게 함을 보여준다. 즉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한 상층에서 산재 노동자는 고용 보호의 일종으로서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한 상층 노동시장에서 경력직 이직이 더 까다롭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 재진입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³⁾

V. 결론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를 노동시장 지위 회복 중심으로 평가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원직 복귀가 노동시장 지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높을수록 크다. 둘째, 건강 및 요양 관련 요인이 지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상층보다 하층과 중층에서 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원직 미복귀 산재 노동자의 주된 지위 회복 실패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층 미복귀자는 원직 미복귀 자체가 지위 회복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지만, 중층과 하층 미복귀자는 근로 능력의 상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지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를 직업 복귀 형태(원직 복귀 여부)나 일자리 특성(고용 형태, 임금)이 아닌 노동시장 지위 회복을 기준으로 평가한 데 있다. 이는 산재 노동자들 간의 재해 이후 노동시장 지위가 아니라, 동일한 산재 노동자의 재해 전후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업 복귀 성과 평가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 방식은 재해 이후 노동시장 지위 변동에 산재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장점을 가진다. 원직 복귀 여부나 복귀 일자리 특성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지위 회복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위 회복을 기준으로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면,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재해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지위에서 일할 권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재해 당시에 상층에서 일하던 산재 노동자가 상층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하층에서 일하던 산재 노동자가 근로 능력 감소를 이유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건, 산재로 인해 노동시장 중심에서 주변부로, 주변에서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산재 노동자는 직업 복귀나 괜찮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음에 만족하기보다, 재해 이전과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재해 이전에 기대한 것과 같은 보상과 승진을 기대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은 곧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이나 하락과 같은 지위 변동에 주목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되거나 배제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상층(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은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원직 미복귀의 비용이 높은 상층 산재 노동자는 일차적으로 원직 복귀 촉진하고, 상층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로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층(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 노동자 역시 원직 복귀자가 원직 미복귀자에 비해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원직 복귀를 통한 직업 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원직 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3) 한국에선 직무급 발달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해 내부노동시장을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 여부에 기반해 넓고 느슨하게 정의하지만(정이환, 전병유, 2001), 내부노동시장이란 기본적으로 내부 노동자에게 외부 노동 시장과 구분되는 보상 및 배치의 관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이 높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입직 제한 및 내부 승진 등을 통해 외부 노동자가 내부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수경, 2003).

양질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층 이상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때 여성, 60대 이상 고령층, 1년 이상 장기 요양자, 유장해 노동자는 재해 이후 지위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서 맞춤형 직업 복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층(중소기업 비정규직)도 원직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유의미한 지위 회복 가능성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만 원직 복귀 중심의 직업 복귀 지원은 계약 종료 시 원직 복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하층의 비정규직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에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재취업 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하층 산재 노동자의 지위 하락(사실상 미복귀)의 주된 원인은 근로 능력 감소이므로, 신체 부담이 높은 기존의 직종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면 새로운 직종으로 전직할수록 돕는 등의 다양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여점과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직업 복귀 성과를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평가 방식은 산재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층 노동자의 재해 이후 노동시장 경험에 산재가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파악하진 못한다. 하층 산재 노동자는 미복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위 회복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는 하층 노동시장 일자리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고려한 재해 전후의 미세한 지위 변동을 알 수 없다. 또한 하층 노동시장 일자리 간의 이질성이 크지 않다고 해도, 산재 노동자는 하층 노동시장의 특징인 높은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능력이 재해 이전보다 낮아져, 이전보다 취약성 및 불안정성을 크게 경험하기 쉬운데 본 연구의 분석은 이러한 경험 차이를 포착하지 못한다. 따라서 하층 산재 노동자의 재해 전후 노동시장 경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개인 수준에서 경험되는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산재를 거치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심화됐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최서영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노동시장 불평등과 사회보험, 노동 건강 정책으로, 현재 건강 취약 노동자와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이 있는 노동자의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mail: ssoyachoi@gmail.com)

참고문헌

- 강다솔, 황성환, 정창률. (2021).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불안정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 131-151.
- 김미옥, 박은주, 김지혜. (2013).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의 효과. *사회복지정책*, 40(3), 133-156.
- 김자영. (2022).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32(2), 23-43.
- 김지원. (2019).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직무적합성이 일자리만족도 및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3(2), 211-248.
- 남예지, 이청아, 홍세희. (2019).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일자리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요인 검증: 다집단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원직복귀와 재취업 간 차이 분석. *노동정책연구*, 19(2), 73-102.
- 박은주, 홍백의. (2012). 산재근로자의 산재 경험 후 종사상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2), 121-152.
- 박은주. (2012). 산재근로자의 첫 직업복귀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4), 359-381.
- 박은주. (2014).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30(2), 191-220.
- 박은주. (2018). 산재근로자의 요양종결 후 재취업 소요기간 및 영향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34(3), 31-58.
- 안영신, 조성재, 김민. (2019).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비교연구. *직업재활연구*, 29(2), 67-83.
- 안준기, 오세미. (2015).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 변동 및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1(1), 한국사회보장학회, 109-135.
- 양재성, 오순복, 임성수. (201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요양종결 후 장애인정자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8(3), 153-177.
- 윤소진, 하승혁, 홍세희. (2023). 산재 근로자의 성공적 복귀 유형과 변화 양상: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영향 요인 및 이직 의도 차이 검증. *장애와 고용*, 33(2), 5-32.
- 이상진, 전무경. (2018). 사업주의 인식조사를 통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 *직업재활연구*, 28(1), 27-29.
- 이상진. (2011). 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직업복귀정책 강화방안. *직업재활연구*, 20(3), 1-34.
- 이승욱, 김선규. (2014).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의무제도 도입논의와 과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2), 71-91.
- 이웅, 엄명용. (2016).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 탐색-원직장복귀자와 타직장재취업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97-118.
- 이정화. (2017).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eturn-To-Work)’: 개인, 분절된 노동시장, 제도 차원의 접근. *보건사회연구*, 37(2), 389-422.
- 이준상. (2019).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3(4), 91-113.
- 이철승. (2017). 결합노동시장지위와 임금불평등의 확대(2004~2015년). *경제와사회*, 115, 103-144.
- 정이환, 전병유. (2001). 1990년대 한국 임금구조의 변화-내부노동시장은 약화되고 있는가. *경제와사회*, 52, 156-183.
- 한기명, 이민아. (2017).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고용유지 영향 요인: 재발사건생존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4), 221-249.
- 황수경. (2003).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3(3), 49-87.
- Awang, J., Shahabudin, M., & Mansor, N. (2016). Return-to-Work program for Injured workers: Factors of Successful Return to Employment.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28(8), 694-702.
- Baldwin, M. L., Johnson, W. G., & Butler, R. J. (1996). The error of using Return-to-work to measure the outcomes of health care.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9, 632-641.
- Butler, R. J., Johnson, W. G., & Baldwin, M. L. (1995). Managing work disability: why first return to work is not a measure of succes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52, 1-19.

- Crook, J., & Moldofsky, H. (1994). The probability of recovery and return to work from work disability as a function of time. *Quality of Life Research* 3(1), 97-109.
- Krause, N., Frank, J. W., Dasinger, L. K., Sullivan, R. J., & Sandra, J. S. (2001). Determinants of duration of Disability and Return-to-work After work-related injury and illness: challenges for future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40, 464-484.
- Mackenzie, E. J., Morris, J. A., Jurkovich, G., Yasui, Y., Cushing, B. M., Burgess, A. R., Delateur, B. J., McAndrew, M. P., & Swiontkowski, M. F. (1998). Return to Work following Injury: The role of Economic, Social, and Job-related facto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11), 1630-1637.
- Oleinick, A., Gluck, J. V., & Guire, K. (1996). Factors affecting first return to work following a compensable Occupational Back Injury.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30, 540-555.
- Pransky, G., Catchel, R., Linton, S. J., & Patrick L. (2005). Improving Return to Work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5(4), 453-457.
- Young, A. E., Roessler, R. T., Wasiak, R., McPherson, K. M., Poppel, M. N., & Anema, J. R. (2005). A development conceptualization of return to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5(4), 557-568.
- Young, E. Y. (2010). Employment maintenance and the factors that impact it after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return to work.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2(2), 1621- 1632.

부록

부표 1. 노동시장 지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직 복귀와 재해 사업장 규모 이상 일자리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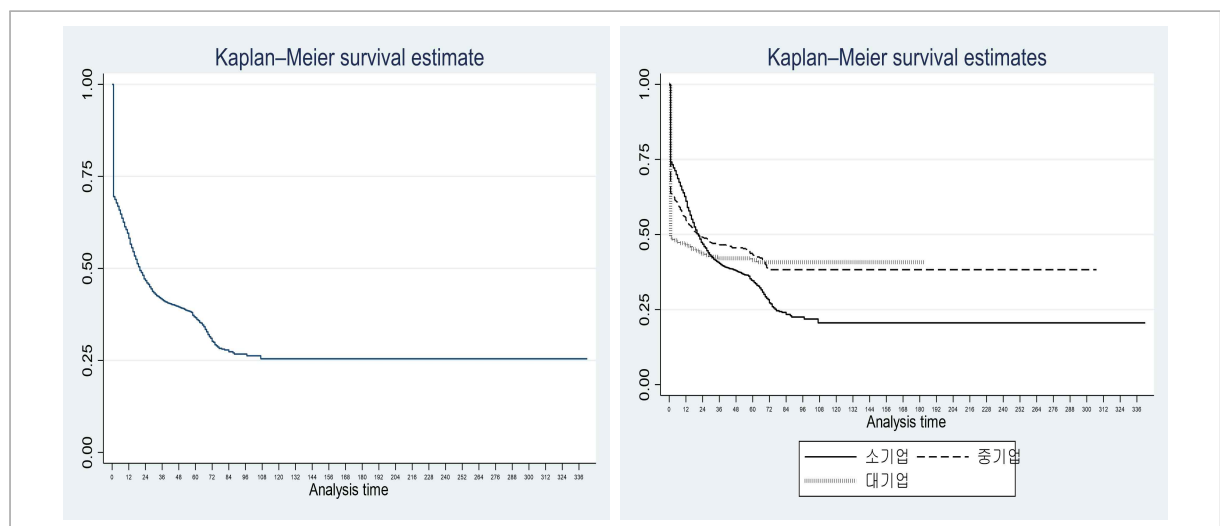
변수명	모델 1 원직복귀	모델 2 재해 사업장 규모 이상 일자리 복귀
성별(rf: 남성)	-0.353** (0.129)	-0.217** (0.0687)
연령(rf: 30대 미만)		
40대	0.350* (0.148)	0.107 (0.0773)
50대	0.317* (0.145)	0.0312 (0.0774)
60대	-0.269 (0.170)	-0.370*** (0.0926)
결혼상태(rf: 유배우자)	0.336** (0.102)	0.0739 (0.0542)
교육수준(rf: 고졸 미만)		
고졸	0.148 (0.114)	0.0942 (0.0612)
대졸	0.175 (0.153)	0.0857 (0.0821)
자격증 보유(rf: 미보유)	-0.118 (0.0980)	0.0611 (0.0517)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rf: 하층)		
중층	0.487*** (0.122)	-0.314*** (0.0674)
상층	1.526*** (0.189)	-0.604*** (0.103)
재해 당시 직종(rf: 하위 2차)		
하위 1차	0.0945 (0.154)	-0.0719 (0.0826)
독립 1차	-0.135 (0.164)	-0.0802 (0.0885)
재해 당시 업종(rf: 제조업)		
건설업	-0.317* (0.141)	-0.180* (0.0763)
기타	0.126 (0.117)	0.00697 (0.0635)
재해사업장 근로기간 (rf: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0.514*** (0.156)	-0.104 (0.0894)
1년 이상	1.492*** (0.113)	0.0369 (0.0670)
재해 유형(rf: 업무상 사고)		

변수명	모델 1 원직복귀	모델 2 재해 사업장 규모 이상 일자리 복귀
업무상 질병	-0.515** (0.197)	-0.0742 (0.114)
출퇴근 재해	-1.782* (0.830)	-0.120 (0.412)
요양 기간(rf: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0.0482 (0.107)	-0.0723 (0.0563)
1년 초과	-0.625*** (0.176)	-0.950*** (0.109)
장해등급	0.0451* (0.0187)	0.0429*** (0.0106)
주관적 건강	0.364*** (0.0446)	0.0856*** (0.0237)
사회 재활서비스 이용	-0.0661 (0.130)	0.0327 (0.0682)
직업 재활서비스 이용	-0.474** (0.169)	0.115 (0.0837)
원직 복귀 여부		2.871*** (0.0911)
상수	-3.218*** (0.392)	
Pseudo R ²	0.251	0.478
관찰 개수	3,270	2,986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모델1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2는 콕스 비례 위험 모형 분석 결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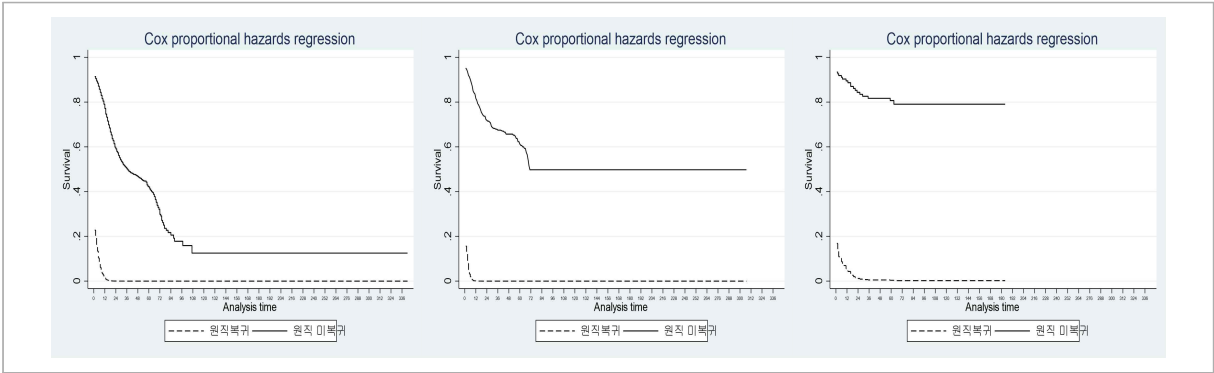
부도 1. 산재 노동자 재해 사업장 규모 이상 일자리 복귀 누적 생존 비율 그래프



주: 1) 재해사업장 퇴사 시점부터 재해사업장 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획득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을 나타냄.

2) 원직 복귀자의 경우 지위가 하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생존분석에서 가장 짧은 생존 기간인 1개월을 할당함.

부도 2. 재해 당시 사업장 규모별 원직 복귀 여부에 따른 생존함수



주: 1) 좌측부터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나타냄.
2) 원직 복귀는 1차 조사 당시 원직 복귀 여부를 나타냄.

Analyzing Factors Affecting Labor Market Status Recovery of Injured Workers: Focus on Differences by Pre-Injury Labor Market Status

Choi, Seoyoung¹

¹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patterns of status recovery among workers with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differ according to their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Previous studies analyzing occupational return outcomes of injured worker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type of return to work and characteristics of return jobs as key criteria. However, these criteria are not independent of workers'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making it difficult to properly assess the impact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Using survival analysis methods, this study presents cumulative survival ratio graphs for status recovery across upper, middle, and lower labor market strata, and examines whether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status recovery differ by stratum.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upper-stratum injured workers have high rates of return to their original workplace, they experience long-term status decline when unable to return. In contrast, middle and lower-stratum injured workers, despite lower rates of return to original workplaces, achieve relatively smooth status recovery through reemployment. Factors influencing status recovery also differed: for upper-stratum injured workers, only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had significant impact, while for middle and lower-stratum injured workers, both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and the degree of work capacity reduction significantly affected status recover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mechanisms hindering status recovery of injured workers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 are not uniform, suggesting that workers' status recovery patterns vary by their labor market posi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orkers'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Furthermore, it emphasizes that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ensure workers' rights to work at the same labor market status as before the injury, with similar compensation and promotion opportunities.

Keywords: Injured Workers, Return to Work (RTW), Labor Market Status, Status Recovery